



I&I RESEARCH ISSUE PAPER

Vol. 2026-08 | August 2026

Global Policy Analysis

구독서비스 소비자보호

국내외 입법동향

조사 및 분석

영국·독일·EU·미국·일본·호주 6개 법역의 구독계약 규율 비교 분석 및
국내 소비자보호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제언

아이앤아이리서치 정책연구팀

Published August 2026

Copyright © 2026 I&I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www.iniresearch.com

Seoul, Republic of Korea



Table of Contents

구독서비스 소비자보호 국내외
입법동향 조사 및 분석

Issue Paper Vol. 2026-08

ES	Executive Summary	03
	연구 배경, 주요 발견사항 요약 및 핵심 정책 제언	
01	시장 현황과 소비자 피해	04
	구독경제 성장 추이, OTT 상담 분석, 무료체험·가전구독 피해 실태	
02	국내 법제 현황과 한계	07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규율 구조와 4대 한계, 법집행 동향	
03	주요국 입법동향	09
	영국 DMCCA · 독일 해지버튼 · EU · 미국 · 일본 · 호주	
04	종합 비교	14
	6개 법역 규율 체계 비교표	
05	정책 제언 및 결론	15
	국내 법제 정비를 위한 5대 제언	

Executive Summary

구독경제는 국내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만큼 보편적 거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는 전통적 계속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계약·갱신·해지 전 과정에서 **규율 공백**이 확인됩니다.

본 리포트는 6개 법역의 구독계약 규율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 입법이 다음 세 원리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대칭성 · 의사결정 자율성 · 해지 용이성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제 정비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2026. 6. 19.

EU 철회버튼 의무 시행

온라인 체결 원격계약의 철회 기능 제공 의무화 (CRD 제11a조)

2026. 7. 2.

호주, 구독함정 금지법 의회 통과

불공정거래관행 금지 및 구독계약 규율 신설, 2027. 7. 시행

2025. 11.

멜론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중도해지 관련 과징금 처분 취소 취지 — 규율 근거의 불확실성 확인

KEY RECOMMENDATIONS

01

구독계약 전용 규율 체계

02

가입-해지 대칭 원칙 법정화

03

갱신 전 통지 의무 도입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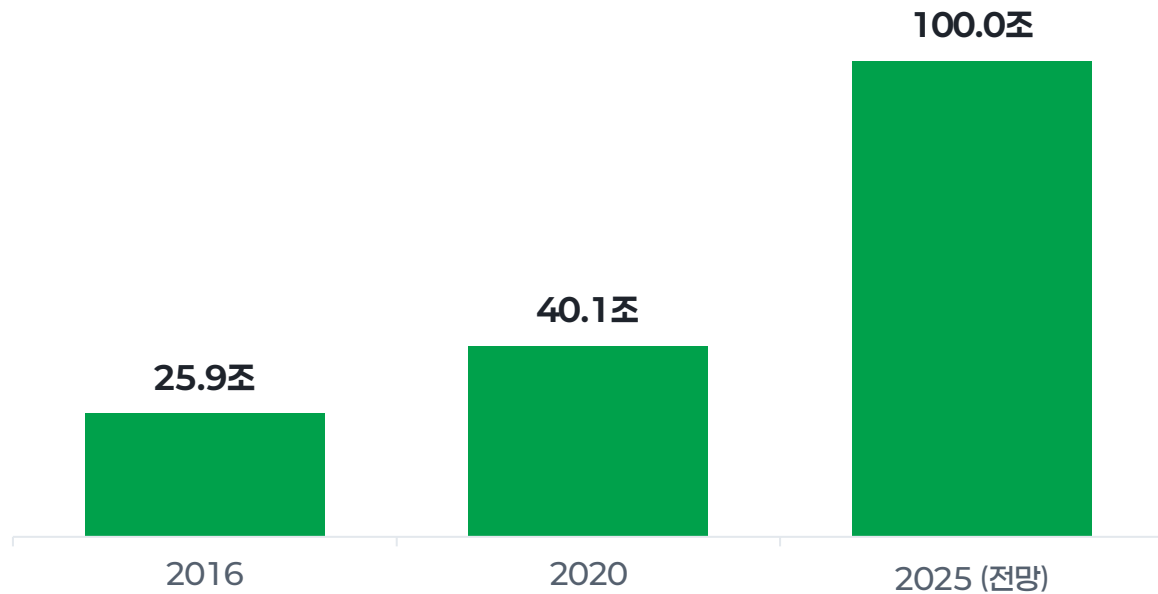
중도해지·환급기준 정비

05

제재 실효성 확보

구독경제 시장 성장 추이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2016년 대비 약 3.9배 성장 전망 — KT경제경영연구소 추정

94.8%

성인의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2025. 2., 성인 1,000명)

39.8%

1인당 3~4개 이용 구간이 최다

같은 조사 — 이용 개수 분포 기준

36개사

공정위·소비자원 실태조사 분석 대상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2025. 12.) — 7개 분야

글로벌 시장은 UBS 기준 2025년 약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됩니다.

OTT 구독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2021~2023년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조사대상 6개 OTT 사업자 관련 상담 **732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344건(47.0%)**으로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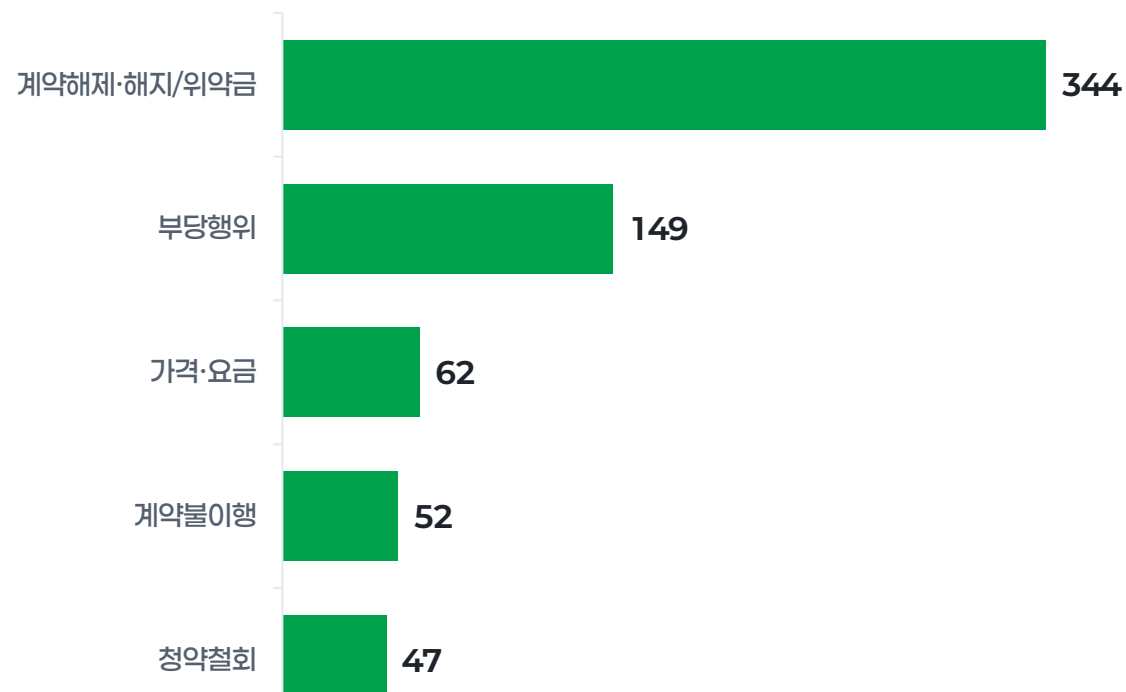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구독료 환급 거부, 결합상품 중복 가입 시 환급 제한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2,624건

이 중 위약금 등 계약 관련 **55.1%** (1,446건)

가전 구독(렌탈) 피해구제 신청 ('22.1.~'25.6. 누적, 매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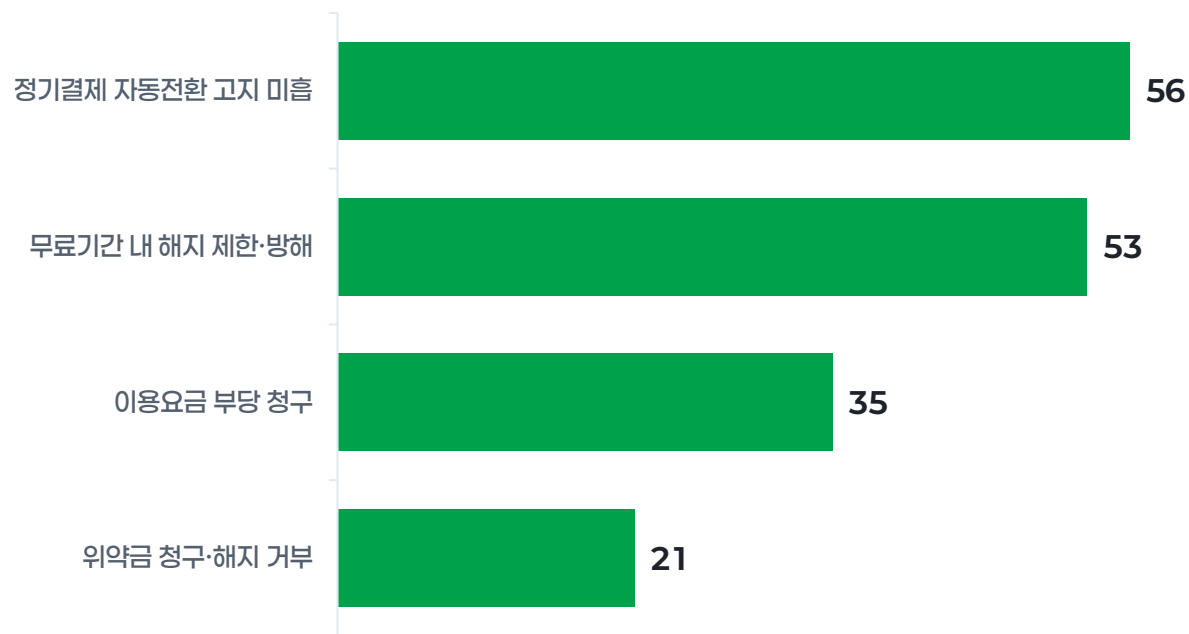
상담사유별 접수 현황 (단위: 건, n=732)



Strategic Implication: 상담의 절반이 '해지'에서 발생합니다. — 해지 절차와 환급기준이 구독서비스 소비자 문제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피해 분석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 유형 (단위: 건)



자동전환 고지 미흡 34.0% · 해지 제한/방해 32.1%

91.2%

피해 사례 중 온라인 배너·팝업을 통해 무료체험에 참여한 비율

무료체험은 가입 문턱을 낮추는 대표적 마케팅 수단이지만, 유료전환 시점의 고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과금으로 이어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유료전환 **14일 전 동의**를 요구하나, 갱신 전 통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Strategic Implication: 가입 단계의 정보제공과 해지 단계의 절차 규율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 현황과 한계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정의(제2조 제10호) · 중도해지권(제31조) · 위약금 제한(제32조)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제17조) · 숨은갱신 금지(제13조 제6항) · 다크패턴 금지(제21조의2)

구독서비스

두 법률이 중첩 적용되나 상호 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은 부재

01 계속거래 해당 여부의 불명확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없는 디지털 구독은 계속거래 정의 충족 여부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02 중도해지 환급기준의 부재

무제한 이용형 서비스의 이용량 가치 산정과 잔여기간 대금 환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03 두 법률의 적용관계 미정리

중도해지(방판법)와 청약철회·정보제공(전상법)이 중첩되나 조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04 제재 실효성의 한계

다크패턴 위반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으로, 영국(매출 10%)·EU(매출 4%)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법집행 동향 2021-2025

2021	OTT 6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중도해지 환불 불가 등 7개 유형
2023. 12.	오디오북 5개사 약관 시정	무료체험 자동 유료전환 등 11개 유형
2025. 2.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숨은갱신 금지(30일·14일) · 다크패턴 금지
2025. 10.	다크패턴 첫 제재	쿠팡 등 4개사 과태료 계 1,050만원, 4.8만명 착오 동의
2025. 11.	멜론 사건 대법원 판결	과징금 부과 파기환송 · 시정명령은 적법 유지
2025. 12.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발간	공정위·소비자원 정책보고서, 제도개선 방향 제시

Strategic Implication: 집행은 강화되고 있으나 규율 근거의 불명확성이 한계로 확인됩니다. — 멜론 판결은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요국 입법동향 개관

주요국은 구독계약의 생애주기를 4단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며, 각국 입법은 **정보 대칭성 · 의사결정 자율성 · 해지 용이성**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Strategic Implication: 구독 전용 규율과 가입-해지 대칭 원칙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 DMCCA 구독계약 규율 체계

규제 개요

2024년 제정된 DMCCA는 구독계약에 관한 **전문 규율 체계**(Part 4 Ch.2, s.253~277)를 마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핵심 사전정보를 분리 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결제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에 구속되지 않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KEY POINTS

- ✓ 이중 쿨링오프 — 초기 14일 + 유료전환·갱신 14일
- ✓ 구독 유형별 법정 주기의 갱신 전 통지
- ✓ 온라인 체결 계약의 온라인 해지 보장

01

정보공시

핵심/전체 사전정보 2단계 분리 제공 — 미이행 시 계약 구속력 부정

DISCLOSURE

02

갱신 통지

갱신 금액·인상액·해지 방법을 주기별 사전 통지

REMINDER

03

해지·쿨링오프

간편해지 의무 + 초기·갱신 이중 냉각기간

EASY EXIT

04

집행

CMA 직접집행(2025. 4.~) — 매출액 10% 또는 £30만 상한

ENFORCEMENT

'전문 규율 + 실효적 집행'의 결합 모델 — 2027년 봄 시행 예정

독일 해지버튼과 EU 확산

BGB 제312k조 — 2단계 해지 절차 (2022. 7. 시행)

여기서 계약 해지

↓ 확인 페이지로 직접 연결 (중간 단계 삽입 불가)

확인 페이지 — 계약 특정·해지 시점 선택

지금 해지

버튼 미제공 시 소비자는 예고기간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가 아닌 민사적 효과로 이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판례 동향

연방대법원(BGH) 2025. 5. 22. 판결(I ZR 161/24)은 1회 결제 후 자동 종료되는 계약에도 해지 버튼 의무를 인정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U 확산 — 철회버튼 시행

지침 (EU) 2023/2673으로 CRD 제11a조가 신설되어, 2026. 6. 19.부터 온라인 체결 원격계약 전반에 철회 기능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Digital Fairness Act 추진

EU 집행위는 가입·해지 대칭, 갱신 전 통지 등을 포함한 DFA 입법안을 2026년 하반기 제안할 예정입니다(2025. 7. 공개협약).

Strategic Implication: 독일의 입법기술이 EU 표준으로 확산된 사례입니다. — 위반 효과를 사법(민사)적으로 설계한 점은 국내 도입 검토 시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 연방 규칙과 주법 동향

연방 — FTC Negative Option Rule

- 2024. 10.** 규칙 채택 — 명확한 공시 · 명시적 동의 · 동일수단 해지
- 2025. 7. 8.** 제8순회항소법원 무효화 — FTC법 §22 사전규제분석 절차 흠결
- 현재** 재입법 절차 진행 중 — 실체가 아닌 절차 하자로 좌초된 사례

규제영향분석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주법 — 캘리포니아 AB 2863 (2025. 7. 시행)

- ✓ 명시적·긍정적 동의(express affirmative consent) 의무화
- ✓ 온라인 가입 계약의 온라인 해지 보장 — 동일수단 원칙
- ✓ 연간 리마인더 통지 + 무료체험 종료·요금 변경 사전 통지

연방 규칙 공백을 주법이 보완하며 사실상의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FTC v. Amazon 합의 (2025. 9.) 민사제재금 \$10억 + 소비자 환급 \$15억, 대상 약 3,500만 명
한국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Source: 16 C.F.R. Part 425 · 8th Cir.(2025. 7. 8.) · Cal. AB 2863 · FTC 발표(2025. 9.)

일본·호주 입법 현황

일본 — 디지털 구독의 규제 공백

- 특정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정기구매는 최종 확인 화면 표시 의무만 규정(2022. 6. 시행)
- 계속적 의무제공 규율은 에스테틱·어학원 등 오프라인 업종에 한정 — OTT·음원 등은 적용 대상 외
- 통신판매에는 쿨링오프가 없고, 갱신 전 통지 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디지털 구독을 명시적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규율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호주 — 구독계약 규율의 입법 완료

- 2026. 7. 2. 「경쟁·소비자법 개정(불공정거래관행)법」 의회 통과, 2027. 7. 1. 시행
- 해지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드는 구독함정(subscription trap) 금지 규정 신설
- 불공정거래관행 일반 금지 + 드립 프라이싱 규제 + 구독계약 공시·해지 요건 도입

영국·캘리포니아를 참조한 후발 입법으로, 가입-해지 대칭 원칙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Source: 特定商取引法 · Competition and Consumer Amendm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ct 2026 (Cth)

6개 법역 규율 체계 비교

구분	영국 DMCCA	독일 §312k	EU (CRD 등)	미국 (CA)	일본	호주 (2026)
전용 규율	전문 챕터	해지 방식 규율	중첩 (DFA 추진)	주 자동갱신법	공백	전용 규정
정보공시	핵심/전체 2단계	—	CRD 일반정보	현저한 공시	최종화면 표시	가입 전 공시
갱신 통지	법정 주기별	—	없음 (DFA 검토)	연간 리마인더	없음	합리적 통지
해지 절차	간편·온라인	2클릭 버튼 상시	철회버튼 (26.6.)	동일수단 해지	방해 금지	가입=해지 대칭
쿨링오프	14일+14일 이중	—	CRD 14일	없음	없음	미포함
최대 제재	매출 10%/£30만	무제한 즉시해지권	매출 4% 등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ACL 제재금
시행	2027 봄 예정	2022. 7.	2026. 6.	2025. 7.	2022. 6.	2027. 7. 예정

Source: 각국 법령·정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국내 법제 정비를 위한 5대 제언

소비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구독경제 생태계**를 위해, 계약 체결부터 해지·정산까지를 아우르는 5대 과제를 제언합니다.

01

구독계약 전용 규율 체계

방판법 계속거래 정의의 현대화 또는 전상법 구독 특칙 신설로 규율의 입구를 명확히 하고, 두 법률의 적용관계를 정리합니다.

02

가입-해지 대칭 원칙의 법정화

온라인 해지 수단의 사전 제공 의무를 규정하되, 위반 시 소비자 즉 시해지권을 인정하는 독일식 민사적 효과 설계를 검토합니다.

03

갱신 전 통지 의무 도입

현행법의 증액(30일)·유료전환(14일) 동의 규율에 더하여, 동일 조건 자동갱신에 대한 주기별 사전 통지를 도입합니다.

04

중도해지·환급기준의 정비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환급 원칙, 위약금 상한 법정, 서비스 유형별 환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05

제재 실효성의 확보

과태료 상한(500만 원)의 재검토와 함께, 멜론 판결이 확인한 제재 근거 규정의 정비를 선행합니다.

“해지는 가입만큼 쉬워야 한다” — 주요국 입법이 수렴하는 원칙입니다.

SUBSCRIPTION ECONOMY

결론

6개 법역의 입법은 규율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보 대칭성, 의사결정 자율성, 해지 용이성이라는 공통 원리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과 동일하게 쉬운 해지를 보장하는 **가입-해지 대칭 원칙**은 사실상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의 기존 법리와 집행 체계, 시장 구조, 사업자의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규율**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리포트가 관련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리포트는 (주)아이앤아이리서치가 수행한 구독서비스 소비자보호 법제 비교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된 통계와 법령 정보의 상세 출처는 각 페이지의 Source 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26 I&I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www.iniresearch.com

Seoul, Republic of Korea